

필자는 도쿄 특파원을 3년간 역임한 뒤 작년 8월 귀국했다.

지난해 일본의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은 전력대란을 현장에서 고스란히 지켜보고 체험했다. 당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일본인 여직원은 절전 캠페인이 시작되자 마치 기계처럼 철저하게 절전 규칙을 지켰다. 매일 실내 온도를 측정하며 에어컨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우리 사무실에서 전기를 조금 아낀다고 일본의 전력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틀자”고 제안했다. 그랬더니 일본인 여직원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전기를 아껴야 이것이 모여져서 국가 전체가 전기를 아끼게 된다”고 말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하철과 버스 등

한·일 양국의 전력위기, 국민들의 위기극복



채 수 환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차장

공공 시설에서도 에어컨을 틀지 않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작동되지 않아도 이를 불평하는 일본인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전력대란에 직면해 있다. 작년 현지에서 지켜봤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일본인들은 원자력 발전소 몇 개가 가동되지 않아도 올해 여름 전력위기를 틀림없이 잘 넘길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6월 21일 실시된 전국민 정전훈련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였다.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된 자발적인 정전으로 약 500만kW에 달하는 전력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추산에 따르면 이는 화력발전소 10기를 동시에 가동한 것과 비슷한 전력량이다.

전 국민 정전훈련을 지켜보면서 문득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이 떠올랐다.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원화값이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자 우리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금모으기 캠페인에 동참해 전대미문의 외환위기를 극복해 냈다. 당시 외국

언론들은 우리 국민들의 화끈한 담합심에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다. 이번 정전 훈련도 우리 국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가급 위기를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15일 정전 대혼란에 직면한 것은 전력 수급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정부와 언론에서 전력 위기 상황을 수시로 발표했고 국민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이 적어도 수년 동안은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저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력 위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제적 망신이 될 수도 있다. 전력당국도 올해 여름 전력수급 위기를 앞두고 ‘전기 모으기’ 라거나 ‘국민 발전소’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보여줬던 저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다.

전력 당국은 “전력 수급 체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 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웃 국가인 일본처럼 자연재해(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작년 9월 전국 순환 정전 대란이 발생하는데 이어 올해 여름에도 전국에 블랙아웃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전력 소비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치솟아 공급 차원의 대책 마련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요금을 미리 현실화 했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공급 차원의 대책을 잘 세워 놓았다면 매년 겨울과 여름 국민들이 마음을 졸여야 하는 전력 위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 에너지수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최근 전력위기 상황이 반영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 원전 추가 건설 운영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연말 대선을 거쳐 내년 초 등장하는 차기 정부도 원전 정책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 전략을 재검토한 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략 부재로 전력 대란이 초래됐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온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정확한 수요 예측과 공급 대책을 갖추고 국가 에너지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KEA

